

손길 안닿는 구석구석 쓰레기... '천혜의 섬' 병든다

인천 웅진군 대청도 등 서해 5도에 중국에서 몰려온 해양쓰레기 처리가 시급하다.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대부분이 접근이 쉬운 해수욕장에 몰려 있을 뿐, 나머지 해변은 주기적인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쌓여만 가고 있어서다.

25일 인천시와 웅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현재 공식적으로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7개면에서 공공근로자 500명을 통해 1주일에 3번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치워지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수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마다 2천여의 해양쓰레기 수거량 중 공공근로자를 통한 수거량은 800여에 그친다. 게다가 수거 활동은 3~12월에만 하고 있어 1~2월은 아예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나머지 해양쓰레기는 환경시민단체 등이 외부에서 섬에 들어와 봉사활동으로 치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이들의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이 줄다보니, 섬 해변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가고

중국발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정화 활동 대부분이 해수욕장 나머지 바닷가는 사실상 방치 공공근로·환경단체 봉사 한계 전담 수거인력 등 근본책 시급

있다. 현재 대청도에서만 광안두 해변, 모래울 해변, 답동 해변, 농여 해변 등에는 수백 t의 해양 쓰레기가 쌓여방치 중이다.

특히 공공근로자들의 수거 활동은 광안두 해변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해변이나 절벽 인근은 아예 손이 닿지 않고 있다.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인근 주민인데, 고령자이다 보니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군은 해양환경정화선 등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곳의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그친다. 군 관계자는 "정화선 등을 통해

해마다 1~2번 정도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군이 주민을 동원한 공공근로자의 수거 활동이나 환경·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공근로자의 손이 닿지 않는 해변이나 절벽 등은 아예 전담인력을 꾸려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청도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는 "접근이 어려운 해변은 공공근로자가 아닌 2인1조의 젊은 인력을 꾸려 매일 수거 작업을 하도록 군 등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중국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자칫 백령·대청의 국가지질공원 등 관광 자원까지 잃을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섬 해변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려 수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며 "효율적인 수거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웅진군 대청도 모래울해변 한켠에 잔뜩 쌓여진 쓰레기 수거자투너머로 해변 곳곳에 중국산 페트병들과 페어구들이 널부러져 있다. 장용준기자

인력·장비 대거 투입 '해양쓰레기와 전쟁'

인천시가 매년 수천t씩 쌓이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수거 사업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웅진군과 함께 75억원을 들여 서해 5도 등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화선(100t급)을 건조한다. 시는 이를 통해 무인도 92곳과 함께 접근이 어려운 해변 및 유인도 23곳 등 4천980km 해상에 걸쳐 해양쓰레기를 치울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해양쓰레기 발생지 인근의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해 해양쓰레기와 쓰레기가 담긴 수습기의 포대 사루를 수거한다. 시는 현재 24곳인 서해 5도 등의 집하장을 2025년까지 56곳으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웅진군 27곳, 강화군 17곳, 중구 9곳 등이다.

인천시 대책마련 분주

2025년까지 1천120억 들여 수거사업 전방위확대 추진 100t급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또 시는 현재 36명인 해양쓰레기 전문 수거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2025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해 상시 전담 수거체계를 꾸릴 계획이다.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의 해양쓰레기 수거 전문성과 책임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5년까지 섬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 5곳을 건립한다. 또 페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 4개와 어구 전처리 시설 4곳 등을 섬지역에 설치해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한다.

이 밖에 시는 한강 하구에서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한강 하구에 하천쓰레기 차단시설 5개를 짓는다. 또한 한강 하구 인근의 도로, 해수욕장 등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계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 경기 등 과도 관련 협약을 해 인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인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천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관광 자원 보존 등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시, 연평어장 가을 꽃게 조업철 맞아 '현지 안전 대책반' 마련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연평어장의 가을철 꽃게 조업 시기를 맞아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해서다.

시는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 웅진군 등 10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열

고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대책반은 지난 12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웅진군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서해 접경해역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연평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있는 곳으로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어민들의 안전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책반은 연평어장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어민계·외포관계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박주연기자

인천시의회 '의정 24시'

의정 인터뷰

이봉락 제1부의장(미추홀구3)

"원도심 탈바꿈... 지역경제 새바람"

"인천 미추홀구 등 원도심 발전을 주도해 인천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국·미추홀구3)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미추홀구를 신도심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원동력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길게는 20년까지 인천 미래를 내다보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천을 실질적인 세계 일류도시,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과 관광·레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포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로·경인전철 지하화 해야 균형발전·교통체증 해결 가능

이 부의장은 미추홀구의회에서 3선 의원과 구의장까지 역임하고,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그동안 미추홀구가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애썼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가 분명했다"고 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인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 미추홀구 등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개발 정책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의장은 지역 내 주요 현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구간인 인천대로의 지하화로 건설, 경인전철을 지하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시가 5년 전 일반화를 결정했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도로를 철거하고 일반화한 뒤, 상부 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도로 주변의 주택가도 용도지역을 변경해 송도신도시와 같은 주상복합 특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부동산 침체 위기에 빠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전면 재설정하는 등의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그는 "수봉공원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하고 있다"며 "공원 하단부의 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고, 대신 공원 상층부는 강화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이루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며 "협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의회는 25일 제4회 간행물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선옥 시의원(국·남동2)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에 박관순 시의원(국·비례)을 선출했다.

앞서 허식 시의회 의장은 이시의원(민·서구5) 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9대 시의회 출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을 위촉한

제4회 간행물심사위원회 개최 위원장에 이선옥 시의원 선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의 간행물인 '인천애의회'를 통해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과 시의회,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박 부위원장은 "시의회의 기능과 활동 등이 많이 알려지는 등 좋은 간행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허 의장은 "새로 위촉한 위원들이 시의회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 간행물에 반영되도록 알찬 내용을 담아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내항 18부두 재개발 '현장 의정'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오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청라 해변공원 캠핑객·주민 '상생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역 내 민원 발생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순학 시의원(민·서구5)은 최근 산업위 사무실에서 김원진 서구의원, 임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어민계·외포관계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박주연기자

산업경제위 '민원 해결사' 역할

청라 해변공원에 있는 청라캠핑파크 캠핑장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많은 이용객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나, 캠핑장에서의 취식 행위와 모닥불 사용으로 인한 냄새 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캠핑장 내에서는 숯불만 쓰고 모닥불은 금지, 장기적으로 캠핑장 내 숯과 모닥불을 이용하고

기를 굽는 행위 제한, 캠핑장에 나무를 심어 주민 피해 최소화 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의원은 "청라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는 케블워크, 공원 등 주민 근린시설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민원사항은 도심 속 캠핑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과 캠핑이용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